

중국의 서해 구조물 무단 설치 규탄 및 즉각 철거 촉구를 통한 서해주권 수호 결의안

의안 번호	9422
----------	------

발의연월일 : 2025. 3. 27.

발 의 자 : 나경원 · 이달희 · 송언석
김선교 · 최수진 · 박덕흠
배준영 · 강승규 · 서천호
박성훈 · 고동진 · 인요한
김종양 · 이종욱 · 김은혜
이인선 · 임종득 · 유상범
박수민 · 곽규택 · 강선영
김승수 · 김민전 · 박상웅
김장겸 · 최보운 · 이종배
백종헌 의원(28인)

주 문

대한민국 국회는 중국이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대한민국과 협의하지 않고 무단으로 대형 철골 구조물 '선란(深藍)' 등을 설치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해양주권을 침해하고 양국 간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규정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중국이 한중어업협정상 양국 간 잠정조치수역에 무단으로 구조물들을 설치한 행위는 대한민국의 서해상 주권적 권리와 관할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국제법 위반행위임을 규탄하고,

중국의 이러한 행위가 하등의 중국의 해양권익 주장의 근거로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중국정부에 해당 구조물들의 즉각적인 철거를 강력히 촉구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중국에 의하여 무단으로 설치된 구조물들을 군사적 목적 등 다양한 해양 관할권 확장 수단으로 활용함으로써 향후 대한민국의 해양주권을 침해할 가능성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중국 정부에 투명한 정보공개와 함께 대한민국 정부와 즉각 협의를 개시할 것을 촉구한다.

3. 대한민국 국회는 정부가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 중국의 위법적인 구조물 설치 상황을 철저히 감시하고, 국방·외교·해양 등 관계 부처 간 긴밀한 협력과 즉각적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대한민국의 해양주권 수호에 빈틈없는 대비 태세를 갖추는 것을 촉구한다.

4. 대한민국 국회는 정부가 중국과의 외교적 협의를 강화하여 이 사안의 외교적 해결을 추진하는 한편, 필요시 분쟁 해결에 관한 유엔해양법협약의 절차를 포함한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

5. 대한민국 국회는 여야를 막론하고 초당적으로 협력하여 국민의 우려와 요구를 반영한 강력한 조치를 추진할 것이며, 정부가 국회의 결의를 적극 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제안이유

최근 중국은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대형 철골 구조물 '선란' 등을 무단으로 설치하고 있으며, 이를 기회로 서해에 대한 자국의 주권적 권리와 관할권 주장의 근거로 고착화하고 군사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러한 중국의 행위는 대한민국의 해양주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양국 간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외교 안보적 갈등을 심화시키는 중대한 문제임.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중국의 무단 구조물 설치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철거를 촉구하고 서해의 대한민국 주권을 확고히 수호하고자 본 결의안을 제안함.